

5G · AI · 빅데이터... 혁신분야 협력 강화

한-핀란드 정상회담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요청
니니스퇴, "문 대통령 노력 높이 평가" 화답
방문 계기 성평등·가족 협력 MOU 등 4건 체결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서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슬로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니니스퇴 대통령과 ▲양국관계 발전 ▲포용성장 ▲한반도 및 유럽 안보 등 지역 정세 ▲글로벌 협력 등의 이슈를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단독 회담에서 양국이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경제, 인적 교류, 국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전개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설명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연합(EU) 의장국을 수임하는 핀란드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핀란드는 혁신, 포용, 평화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한국 정부도 국정철학으로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핀란드로부터 많이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려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한국 정부의 노력을 핀란드 정부가 일관되게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 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한미일'(첨과대는 문 대통령이 남북미를 잘 못 언급했다고 설명) 간의 트랙2 대

화의 장을 마련해서 3국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주셨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니니스퇴 대통령은 핀란드가 과거 헬싱키 프로세스(냉전 시대 유럽 동서 진영 긴장 완화에 기여한 협정)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밝혔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노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핀란드도 계속해서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겠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와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확대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간 협력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교류 협력,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위 산업, 에너지, 보건 등 새로운 분야로 다변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K-9 지주포 수입 국인 핀란드와 방산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ICT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니니스퇴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간 활발한 교류 및 소통 증진에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부산·헬싱키간 직항 노선 신설 ▲인재 교류 협력 ▲워킹 홀리데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적

교류를 증진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부산·헬싱키간 직항 노선 신설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지금까지는 인천·헬싱키 간 항공 노선만 주 7회씩 운영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우수한 인재들이 성장의 주역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핀란드의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인 '탈렌트 부스트' 등을 통해 ICT 등의 분야에서 인재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운영 기조인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과 니니스퇴 대통령은 분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10일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서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배와 성장이 균형을 이루고 혁신이 이를 뒷받침하는 포용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고령화 문제 대응 ▲성평등 증진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및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발전 등 지역 및 범세계적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북극 관련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핀란드가 지난 2년간 북극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북극 관련 국제 사회 논의를 선도해온 점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핀란드 북극협의회 및 북극이사회 등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북극 이용을 위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과 핀란드는 정상회담 종료 후 문 대통령과 니니스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항공협정 ▲중소기업, 스타트업, 혁신 분야 양해각서(MOU) ▲에너지 협력 MOU ▲성평등·가족 분야 협력 MOU 등 4건의 정부간 MOU에 서명했다.

특히 양국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혁신분야 협력 MOU를 통해 핀란드에 한국 스타트업 거점 센터(Korea Startup Center)를 설치하고 관련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양국은 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인재 교류 협력 MOU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MOU ▲부산·헬싱키간 직항 개설 MOU 등 12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뉴시스

도의회 예결특위
2018 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심사

이월·불용 사업 증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 익산)는 10일부터 14일까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 심사시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오류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며, 10일 전라북도 결산 심사를 시작으로 13일부터는 도교육청 결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세출결산액 5조 6705억원 중 5조 4991억원을 집행하고, 2933억원(5.2%)을 미집행하여 1484억원이 이월하고, 1449억원이 불용처리했다.

미집행사유는 절대공기 등 사업기간 부족의 사유가 많으며,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도교육청은 2018년 세출결산액 3조 8232억원 중 3조 5065억원을 집행하고, 3167억원(8.3%)을 미집행해 2382억원이 이월하고, 785억원이 불용처리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기관의 특성상 주로 방학에만 공사를 이루어져 이월액이 많으나, 추경에 편성된 시설사업은 대부분을 이월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김대오 위원장(익산)은 "결산은 예산심사의 토대가 되는 만큼 도와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 잘못된 사안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오류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민주주의의 위해 정치적 각성해야"

문 대통령, 6·10 민주항쟁 기념사... '깨어있는 시민 정신 중요' 역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자유를 위해 인내와 희생이 따르고, 평등을 위해 나눔과 배려가 따르듯이,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추고 정치적으로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옛 대공본실 앞에서 거행된 제 3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자기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 과정에 참여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아직 자라고 있다. 민주주의를 제도뿐만 아니라 생각하면 이미 민주주의가 이뤄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른다"며 "민주주의

는 제도이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다. 더 자주 실천하고 더 많이 민주주의자가 돼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규정했다.

이어 "허허벌판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가냘픈 꽃에 불과하다"며 "너 많이 햇볕을 받고, 때에 맞춰 물을 주어야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비유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되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는 것도 민주주의"라며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불평등 해소, 공정사회 구현, 경제민주화 실현 등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 정신이 중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언제라도 과거로 퇴행하고 되돌아갈 수 있음을 촉발혁명을 통해 확인했다"며 "일상 속의 민주주의가 더 튼튼해져야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국민 81%,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 '찬성'

리얼미터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에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YTN '노동쟁의 더뉴스' 의뢰로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80.8%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